

지난해 소매판매 2.2% ↓ 카드대란 이후 최대폭 감소

통계청, '연간 산업활동동향' 발표
광공업·서비스업 중심 생산 증가
설비투자 호조... 건설부분은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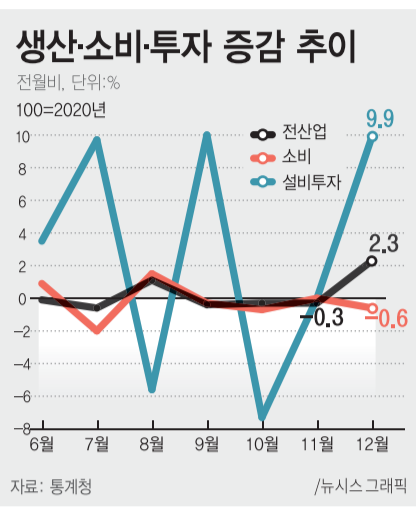
지난해 국내 소비가 최근 21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연간 소비가 최근 3년 연속으로 감소했는데 감소 폭은 2022년에 비해 2023년이, 2023년에 비해 2024년이 더 컸다. 다만, 산업생산과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늘어났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매판매(소비)는 전년대비 2.2%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 2002~2003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된 2003년(-3.2%) 이래 최대 폭 감소다.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3.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4%), 의복 등 준내구재(-3.7%)에서 1년 전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소매업태별로는 전문소매점(-3.4%),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4.1%), 슈퍼마켓 및 잡화점(-5.9%), 백화점(-3.3%), 대형마트(-2.3%)에서 판매가 줄었다. 반면 무점포소매(2.4%), 면세점(3.1%)은 판매가 늘었다.

최근 월별 소매판매는 지난해 9월(-



0.3%)와 10월(-0.7%) 뒷걸음질한 뒤 11월(0.0)에도 증가로 전환하지 못했다. 이어 12·3 사태가 발생한 12월(-0.6%)에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처럼 소비 추이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의 2024년도 큰 폭 감소는 국내총생산(GDP) 성장세를 억제하는 주요 걸림돌로 작용했다.

반면, 지난해 전(全)산업생산지수와 투자는 전년대비 각각 1.7%, 4.1%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늘면서 호조를 보였다. 광공업 생산은 4.1% 증가했다. 부문별로 전기장비, 1차금속 등에서 생산이 감소했으나 반도체, 의약품 등에서 증가했다.

광공업 출하는 0.5% 증가했다. 내수 출하가 2% 줄었지만 수출 출하가 4% 늘었다.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2.9%로 전년대비 1%포인트(p)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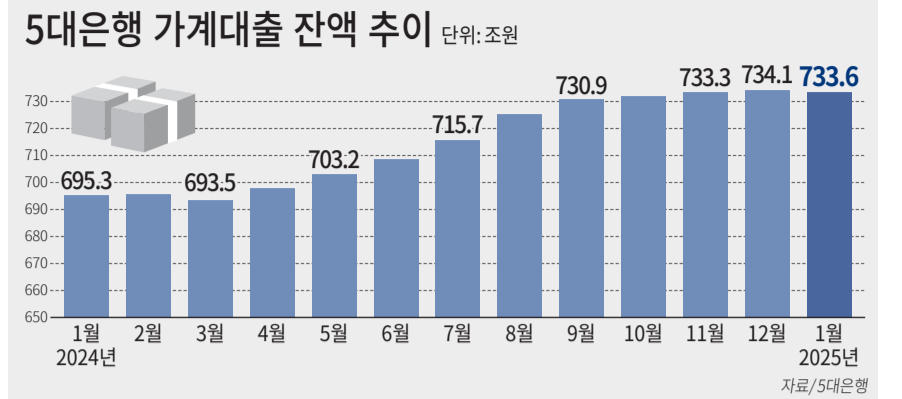
설비투자 역시 호조를 보였지만 그중 건설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2.9%), 운송장비(7.8%) 등에서 늘면서 전년대비 4.1% 증가했다. 선형지표 성격의 국내기계수주도 1.2% 늘었다. 이에 반해,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은 4.9%나 급감했다. 토목(1.8%)은 증가했지만 건축(-6.9%)에서 공사 실적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결과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 한 해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이 산업을 견인하는 흐름이었다"며 "서비스업 생산도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에 비해 소매판매나 건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좋지 않은 상태다. 다만 최근에 건설 수주가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 건설기성으로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허리띠 졸라매는 가계... 신용대출 상환 증가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감소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10개월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강화로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대출자들이 연말·연초 상여금으로 고금리 신용대출부터 갚은 영향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 658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734조 1350억 원)과 비교해 4762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첫 감소세다.

가계대출은 개인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02조 822억원으로 한 달 전(103조 6032억원)과 비교해 1조 595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4860억원 감소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감소한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의 상여금을 받아 대출을 갚은 사람이 늘면서 감소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다.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9조 9771억원으로 전달(578조 4635억 원)과 비교해 1조 5136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3월 이후 증가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신용대출의 감소세가 이어짐에 따라 서민들의 자금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민들의 경우 급전 필요시 주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데 문턱이 높아지면 2금융권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전환한 만큼 은행들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대출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 경쟁을 통해 가계대출 문턱이 서서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서민 자금 공급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지방 대출 증가 속도에는 예의를 두고, 3년간 대출을 줄였던 2금융권 가계대출을 늘리게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이 서민 자금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사별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소비위축 직격... '가격·특화' 승부수

유통업 중 가장 큰 소비 감소 폭 기록
초저가 행사 등 경쟁력 확보 '구슬땀'

대형마트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유통업 중 가장 큰 소비 감소 폭을 기록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더불어 탄핵 정국, e커머스의 신선식품 시장 확장 등이 맞물리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분기 실적 전망도 어둡다. 4분기 소매판매를 전년 동기과 비교하면 백화점이 -3.0%p, 슈퍼마켓·잡화점이 -4.3%p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는 -5.6%p로 면세점을 제외한 유통업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하락세의 원인으로 고물가와 고환율에 더해 탄핵 정국까지 악재가 겹친 것을 지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탄핵 정국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이상 기후로 식료품 물가가 상승한 상황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또 e커머스 업체들의 신선식품 배송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대형마트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쿠팡은 지난해 산지 직송 서비스를 도입, 신선식품 및 농산물 배송을 다각화하며 신선식품 시장을 공략을 확대해 나갔다. SSG닷컴과 마켓컬리 등도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며 경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응해 대형마트들은 기존 매장을 특화 전문 매장으로 개편하고, 초저가 가격 경쟁을 펼치는 등 반등을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서울 강동구에 그로서리 특화매장인 천호점을 6년 만에 새롭게 개점했다. 이마트 역시 지난해 12월, 3년 만에 그로서리 식품 전문매장 '이마트 푸드마켓 수성점'을 오픈했다. 해당 매장은 신선식품을 강화하고 일반 할인점 대비 20~50%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제공한다.

홈플러스 또한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 인천 간석점을 새단장해 재오픈했다.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는 '세상 모든 맛이 살아 있다'는 콘셉트 아래 기존 메가 푸드 마켓에 생동감을 더하는 현장 콘텐트를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식료품 중심의 초저가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롯데마트는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물가 안정 캠페인 '더 핫'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AI를 활용해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 역시 이달 27일까지 '가격격격 선언'과 '가격역주행'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95종의 초저가 행사 상품을 선보인다.

황운기 이마트 상품본부장은 "명절 직후 '가격격격 선언'과 '가격역주행' 행사를 동시에 진행해 장보기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며 "올해 이마트는 더욱 경쟁력 있는 가격과 차별화된 상품을 통해 오프라인 쇼핑의 즐거움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전국 4년제 대학 3곳 중 1곳 '등록금 인상'

15년간 이어져 온 동결기조 무너져

전국 4년제 대학 3곳 중 1곳 가량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논의 중인 대학까지 포함하면 절반에 가까운 대학이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5여년 간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무너지면서 교육계에서는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학 재정 구조를 바꾸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일반 4년제 대학교와 교육대학 등 총 199곳 중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한 대학은 총 57곳이다. 대학 29%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셈이다.

특히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가 대부분 인상을 확정하면서 등록금 인상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학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올해는 두 배가 넘는 대학들이 이미 인상을 결정했다.

교육 당국은 여전히 등록금을 동결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아직 올해 등록금을 확정하지 못한 대학들도 늦어도 다음주까지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지면서 등록

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학 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4'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비 정부 재원 비율은 0.7%로, OECD 평균(1%)에 훨씬 못미친다.

허수경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조직사무국장은 "대학에 돈이 없다면 등록금을 인상할 게 아니라 사립대의 근본적인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가 대학 재정에 더 투자해야 한다"라며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해 온 재정 구조를 바꾸는 게 먼저"라고 촉구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하다. 고등교육특별회계는 대학 재정 위기를 고려해 지난 2023년부터 3년 한시로 유·초·중·고 지방교육재정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 일부를 대학 재정에 투입하도록 한 것으로 올해 말 법정 시한이 끝난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전북대 총장)은 "지난 2023년 신설된 대학 재정에 큰 역할을 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연장시키는 게 (대교협 총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